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차상우

경남대학교 국동문체연구소 연구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들은 음모로, 외생적충격론, 정책실패론, 구조적 모순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필자는 네가지 원인을 살펴본 다음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이 아닌 국가의 "제도창출능력"을 기초로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분석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 익숙하지 않았던 IMF가 한국에 발을 들여 놓은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정계와 학계를 막론하고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수많은 분석이 이루어졌고, 정책제언도 많았다. 정부는 정책기조를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최근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사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없이는 한국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라는 기조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IMF 사태 이후를 잘 수습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말처럼 우리는 IMF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가? 김대중 정부는 어떠한 한국경제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전망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지만 필자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할 능력은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IMF 사태이후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담론 지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현



우리는 IMF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가? 김대중 정부는 어떠한 한국경제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전망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경제위기의 근원이 그릇된 경제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여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경제철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IMF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입장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음모론

우선 IMF 사태 초기에 나타난 주장은 '음모론' 내지 '방조론'이다. 지금에 와서는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긴 하지만 외환위기 초기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운동권 일각에서는 '음모론'이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그 주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영미권의 자본주의,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부기자본을 앞세워 동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부기자본도 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제 위기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부기자본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와 남미의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그리고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철학인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에 미국의 관료들이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이 이제 그 한계에 달했다며 자유 경쟁시장이 이식되어야만 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이 약간의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이 주장의 최대의 약점은 미국, IMF, 국제부기자본의 이해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설

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② 외생적 충격론

둘째는 외환위기가 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 하였다는 ‘외생적 충격론’이다. 1997년 말 한국경제가 위기의 징조를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경제의 기초구조(funda-

mentals)는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의 김영삼 정부 경제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국채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97년 하반기부터는 95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에서 탈피하여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까웠고, 실업이나 인플레이션도 당시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다만 94년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동남아시아 후발개도국들의 가격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지만, 이것도 GDP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외생적 충격론’은 경제의 기초구조가 건전하지만,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가 갑자기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97년 여름에 태국, 말레이시아

‘구조적 모순론’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라는 것인데, 그것은 한 국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 뿐 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등의 외환위기로 인해 동아시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갑자기 비관적으로 바뀌어 동아시아에서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96년의 경우 이 지역 자본유입의 규모는 928억불로 94년의 474억불에 비해 95%이상 증가하였지만 97년에는 152억불로 무려 776억불 정도가 유출되었다. 민간부문의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97년 한해동안 이 지역에서의 자금유출 규모는 무려 1,050억불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자금 이탈현상으로 인하여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갑자기 심리적 패닉(panic)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가발전 식으로(self-fulfilling)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바드대학 교수인 제프리 삭스나 세계은행 부총재인 조셉 스티글리치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스티글리치는 이제까지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여겨지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외환위기 이후에 위기의 근본요인으로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높은 저축율, 건실한 재정 등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외생적 충격론’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경제의 기초구조는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구조개혁보다는 외환시장에서 이탈한 자금

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긴급히 빌려와 이를 메꾸어 외환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으로 내부의 개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③정책 실패론

셋째로, 외환위기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책 대응이 있었다면 충분히 진화할 수 있었는데, 부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확산되었다는 ‘정책 실패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정치권의 책임공방에서 제기되었고, 정권교체 이후에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과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다. 우선 금융기관의 외채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기아자동차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제하는 등으로 민간부문의 신용위기가 국가외환위기로 확산되어, 민간과 국가의 신뢰도가 동시에 하락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낭비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비단 97년의 단기 정책 대응의 실패만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에도 시선을 돌린다. 지난 92년부터 자본자유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들

의 무리한 단기차입을 방지하였고, 더구나 1994년부터 이루어진 지방단지사의 종금사로의 전환인가, 96년 인가기준의 완화로 인한 단지사의 종금사로의 일괄 전환 등 매우 성급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즉, 경직적인 환율운용, 성급한 단기자본시장의 개방, 부적절한 금융규제, 정부의 압록적 채무보증 등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된 정책대응은 경제구조의 개혁보다는 정책의 수정, 특히 금융정책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철학, 경제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④구조적 모순론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마지막은 외생적 충격과 정책대응의 실패에 더하여 외환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이것이 경제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구조적 모순론’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제도 또는 구조의 위기라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후발개도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기 위

해 성장주의적, 수출위주의 경제전략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조달, 투자의 우선순위의 결정, 기업정책결정에서의 노동계급의 배제 등 강력한 기업 중심의 경제개입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합구조는 민간부문의 높은 저축을 금융부문이 무제한적으로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고투자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발개도국으로서 초기의 빠른 성장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억압적 정책을 등에 업어 가격경쟁력 우위에 근거한 수출의 확대를 통해 성장한 재벌들은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총수의 독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고, 이들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배분받기 위한 반대급부만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기업경쟁력의 제고는 외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는 부패구조로 변질되어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상황과 이질화되었다.

이렇듯 국가의 과잉보호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재벌들은 80년대 이후부터 민간주도 경제구조를 피하였다. 민간경제구조로의 이행은 80년대 후반 이후에 그 실질적 전선을 이루게 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더 이상 가격경쟁력만으로는

균열된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는 세계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개방에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경제행위로 인해 작금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수출의 상당부분을 내수로 돌려 국내 소비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는 한편 과잉중복투자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신인도가 확보된 재벌들은 이제 국가의 규제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해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자율화를 시행하였다. 이렇듯 일련의 민간경제구조로의 이행조치로 인해 이전의 일체화된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는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합구조의 부패한 후진성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국가는 금융을 통해 정책금융 등 각종 특혜를 기업에 배풀고 반대급부를 쟁였으며, 재벌도 여전히 총수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균열된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는 세계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개방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경제행위로 인해 작금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구조적 모순론”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위기의 맹아가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특정한 사건 및 부적절한 정책대응으로 인해 이번에 폭발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작금의 위기는 구조 및 제도의 위기이므로 한국경제 구조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조적 모순론'은 두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시장중심적 접근방식'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경유착이 심화되어 국가-금

융-기업의 연합체제가 형성되어 시장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이 주장은 변화한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는 과거와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경유착, 관치금융, 국가의 기업투자 결정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총체적 부실을 낳았고, 이것이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시장제도의 복원'이 유일한 정책적 대응이다. 즉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이식이

사측의 일방적인 침해하고 수신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사측이 조직한 시위.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에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과거의 유산인 재벌들의 비관련 다각부문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전문업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경영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며, 금융부문에의 최소한의 효과적인 감독체제를 정비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 작

금의 경제위기가 국가의 경제에의 과도한 개입=과잉규제로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국가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놔두거나 최소한의 개입만을 해야만 한다.

국가 중심의 접근방식

다른 하나의 입장은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정부실패보다는 시장실패를 강조한다. 즉 정부의 과잉규제로 인한 관 치경제의 폐해보다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한 경영이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차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정부가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정부의 과소규제로 인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 (moral

'시장중심적 접근방식'과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은 모두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위기가 배태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를 가져야 하는지의 부분에서 이 두 입장은 갈라진다.

hazard)가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국가가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적 결론이다.

즉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완하는 적절한 제도의 형성이 중요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 문제이고 따

라서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을 창출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기능장애를 막기 위해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형성=국가의 개입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인해 발빠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장중심적 접근방식'과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은 모두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위기가 배태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를 가져야 하는지의 부분에서 이 두 입장은 갈라진다. 현 정부는 전자의 입장에 서서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 현재의 위기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여기에서 밝히고 싶다.

2. 시장 중심인가? 국가 중심인가?

위에서 살펴본 '시장중심적 접근방식'과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은 모두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적 기초는 매우 다르다. 동일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철학적 기초가 달라 경우에는 그 파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한 재벌개혁이지만 위의 두 입장에서 나오는 재벌개혁은 그 효과가 상이할 것이다. 자금의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부적절한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부적절한 정책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혁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일시에 이를 터뜨리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제철학을 가지고 개혁과정을 나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이제까지 한국경제가 어떠한 경제철학에 기초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압축성장이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한국의 압축성장의 도구는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란 선별적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을 통한 재벌의 투자유도와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이것

은 높은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체계이고, 따라서 고저축-고부채-고투자 경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금융-기업의 연합구조는 국가가 국민경제의 장기적 계획 하에서 금융부문의 자금조달을 통해 재벌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적 상황, 국제적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 또한 가지고 왔다. 즉 해외경제의 위축, 자금조달의 애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부채하의 기업부문은 금방 유동성이 약화되고 이를 통해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의 '시장주의' 경제정책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의 과잉규제,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시장제도의 복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제도의 복원=시장만능주의야말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철학이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국가-금융-기업 연합구조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력한 재벌규제정책을 신경제정책에 포함하였는데, 국가의 후원 하에서 너무나도 커버린 재벌에 의해 그러한 재벌규제정책은 후퇴하였다. 금융실명제, 업종전문화정책 등이 그러하다. 정권 후기로 갈수록 그러한 후퇴는 더욱 심해져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나 출속적인 금융개혁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국내개혁정책의 실패는 곧 김영삼 정부의 국정좌표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화로 대체되었다. 세계화 프로그램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하게 대응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

고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자유방임 시장이데올로기의 전형인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세계화는 곧바로 개방화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시절에 초안을 만들어 놓은 주식시장 개방화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완성되었고, 재벌과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국가의 파이낸셜리스트가 철폐되었던 것이다. 파거 압축성장 시기에 자본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자본의 통제권을 포기하자 이자율의 국내외 격차에 의해 해외에서 자본유입이 급속도로 많아졌고, 이를 가지고 건전한 자금증개기능을 담당해야 할 금융기관들은 보다 높은 수익, 즉 보다 높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보다 손쉬운 장사를 하였다.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난 종금사의 영업행위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한 위험천만한 자금운용에도 불

경기부양책 속에서 경제구조조정이 확석되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벌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구하고 국가는 출속적인 금융개혁법안만을 처리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적절히 감독하거나 규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종금사는 해당부처의 감독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예이지만 국가의 파이낸셜리스트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이 아니라 오히려 파소규제로 인한 시장

제도의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재벌들은 김영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들에 저항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채 총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비투자를 확장하는 등 파이낸셜리스트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삼성의 자동차 산업의 진출, 삼성과 현대와 LG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파이낸셜리스트, 그리고 한보와 기아와 삼미의 철강업에 대한 중복 투자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이로써 반도체, 철강, 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심각한 파이낸셜리스트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파이낸셜리스트는 재무구조면에서 차입의존도의 신화, 단기차입에의 과다한 의존 등으로 만기구조의 불일치 문제를 초래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계열사간 상호보증제도를 통하여 재무의 육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재벌부문은 만약 금융부문이 불안해져 신용이 경색되거나, 아니면 대외적 충격으로 수익성에 문

제가 발생하게 되면 곧 폭발할 정도로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 즉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한국에 경제위기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적 충격이 없었을지라도 97년 3월에 소위 소위기(minor cirsis)를 겪었고, 그리고 30대 재벌중에서 7개가 도산하는 등 한국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은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정책기조의 변화와 기존의 축적전략 사이의 불일치이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세계화 이데올로기=자유경쟁적 시장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를 꾀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시장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시장이라는 게임의 장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주체가 그곳에 뛰어 들어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의 규칙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해 준다는 것이 자유경쟁적 시장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게임의 장인 시장을 이제부터 창출해야 하는 과정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시장창출과정에서의 기능장애를 적절히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조절능력=제도가 필요했었지만, 그들은 그것의 필요성을 간과하였고, 현실의 시장과 추상적 시장을 구

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다.

국가의 “제도창출능력”을 길러야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국가의 제도창출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근거하여 이제까지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경제구조 자체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초점을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재벌들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두고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재벌들은 신용경색의 완화 및 수출지원 등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기부양책 속에서 경제구조조정이 회색되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벌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른다. ♦♦♦